

“원·하청 구분 없는 노동조합 만든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 취임식 ... 위원장, “430만 제조업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계획”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새 집행부 취임식을 열고, 현장조직력 강화로 2021년 단체교섭 조속한 마무리와 산별교섭 법제화 운동을 선포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월 14일 울산 사내 체육관에서 ‘23·24대 집행부 이·취임식과 21년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병천 지부장은 “힘든 시기 지켜냈다. 이제는 반격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당선돼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지부 취임식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진원지인 현대중공업지부의 35년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 세상을 여는 여정이었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가계부채 1,800조 원에 민중은 숨 막혀 고통받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은 천문학적 수준의 돈을 벌고, 재벌 공간에 1,000조 원 넘게 쌓여 있다”라고 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재벌 주도의



산업전환으로 430만 제조업 노동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면서 “금속노조는 430만 제조업 노동자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 20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천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조합원 동지들께서 정병천 지부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2022년 만듭시다”라고 당부했다.

정병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취임사에서 “조선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사측은 2021년 단체교섭 제시안조차 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지부장은 “새 집행부는 우선 2021년 교섭 마무리를 위해 현장조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라며 “조합원들의 노동자 단결 의식을 다시 깨워 강화한 현장조직

력으로 사측을 압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지부장은 한 단계 발전하는 노동운동을 펼치겠다고, 산별노조 정신에 따라 기업별 교섭을 타파하기 위해 산별교섭 법제화 운동을 장기 사업목표로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정병천 지부장은 산별노조

로 원·하청 구분 없는 세상, 불평등 타파, 노동자 모두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천 지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하청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선포했다. 정 지부장은 “중공업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면서 정 지부장과 임원들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2004년 박일수 열사 영안실 현중노조 대의원 침탈 사건’의 과오를 고개숙여 사죄했다. 정 지부장은 “그때의 과오로 상처받은 모든 노동자에게 사죄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원·하청 구분 없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하청노동자 노조 활동 특별기금 1천 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노사협조 폐기, 노사대등 원칙 세운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9대 집행부 출범 ... 위원장, “제조업 노동자 지키기 20만 총파업 조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9대 집행부 출범을 선포했다.

안현호 신임 현대차지부장은 “노사협조가 아닌 노사대등의 원칙을 세우겠다”라며 단체협약 사수와 고용안정, 현장 투쟁 강화, 해고자 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1월 12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8대, 9대 지부 집행부 이취임식을 열고, 9대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지부는 이날 행사를 노조, 지부 전·현직 간부와 사측 관계자만 참석하는 작은 규모로 마련했다. 코로나 19와 20대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 19가 계속 대유행하고 있다. 불평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차별체제 다단계 하청구조가 공고화하고 있다”라면서 “직접고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350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다”라고 금속노조를 둘러싼 엄혹한 정세를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20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선거를 진행 중이지만 대선판 안에 노동자 이야기는 없다. 노동자 운명은 결국 우리 노동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20만 금속노동자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라고 당부했다.

이상수 전 현대차지부장은 이취임사에서 “8대 집행부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조합원 건강권을 챙겼다. 임금과 복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 고용안정을 위해 사측의 국내공장 우선 투자를 끌어냈다”라고 평가했다. 이상수 전 지부장은 신임 집행부가 노동조합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전임 집행부의 사회적 조합주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안현호 신임 현대차지부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19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었다. 회사는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현장 위기를 조성하고 조합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라고 지적했다. 안 지부장은 집행 목표로 ▲현대차지부 위상 강화 ▲단체협약 사수 ▲조합원 고용안정 ▲현장 투쟁 강화와 차별철폐 ▲해고자 복직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안현호 지부장은 “9대 집행부는 노사협조를 노사대등의 원칙으로 바꾸겠다. 사측이 대등한 노사관계가 아닌 일방 협조를 강요한다면 지부장으로서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호히 나설 것이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대우조선 · 현대중공업 합병 최종 무산

EU 공정위, LNG 운반선 독과점 우려 반대 ... “재벌 승계 중단하고 노조와 조선산업 부흥 논의해야”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생산 독과점 우려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불허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독과점으로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라면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반대를 결정했다. 이로써 3년을 끌었던 두 조선사의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으로 결론 났다. 유럽연합 공정위는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독과점 우려가 있다” 라는 이유를 댔다. 두 회사의 LNG선 생산 점유율을 합하면 60%가 넘는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그릇된 판단으로 시작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자본과 권력이 강요한 인수합병은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판단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를 맞았다” 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불발은 필연이다. 이번 불승인의 결정적인 원인인 LNG 운반선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하면 세계 시장의 65%를 합병기업이 생산하게 된다” 라며 “애초에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의 승인 노력조차 없으니

불승인은 자명한 결론이다” 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불승인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형 LNG 운반선은 고도로 정교한 선박으로 극소수 업체만 건조할 수 있다. 합병기업은 LNG 운반선 건조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인수합병이 시장에 끼칠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어떠한 공식적인 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시도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을 밝혀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부추긴 정권이 함께 짊어지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금속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우조선을 헐값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동걸 은행장은 노동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며 “유럽의 승인은 당연하다” 라고 장담하다가 최근 불승인 가능성이 커지자 “시민사회의 반대가 불승인의 원인” 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일관했다” 라며 “노동조

합과의 협의 없이 대우조선 인수를 강행했다. 합병 과정에서는 유럽연합이 요구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갈등과 혼란만 만들었다” 라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의 수상한 행보 뒤에는 재벌 3세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노림수가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2020년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모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두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준이 아들 정기선에게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장치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사를 이용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3세 승계를 위해 대우조선 인수라는 명분이 필요했고, 목적을 달성한 순간에는 굳이 LNG선 생산을 포기하면서 대우조선을 합병할 이유가 사라졌다” 라며 “지금이라도 하는 일 없이 이익만 챙기는 한국조선해양을 해체하고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주력하는 경영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별써 대우조선을 어느 기업에 넘기냐는 물음이 언론에 넘쳐난다. 질문은 ‘누구에게’ 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대우조선과 한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만들 것인가’ 가 되어야 한다” 라면서, “금속노조는 모든 조선소 노동조합의 연대 속에서 그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